

다문화 사회와 단일성 극복



조 정 남 (한국민족연구원 원장)

우리도 이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그에 수반되는 갖가지 문제들이 증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적절한 대처 없이는 그 어떤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칫하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상당 영역에서의 다문화적 진전을 오히려 역행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특히 최근 이민 수입 문제가 정부 시책의 하나로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민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더불어 다문화 사회의 건전한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에 대비한 효과적인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새롭게 전개될 다문화 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다문화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의 필연적인 도래에 앞선 선행적인 환경 조성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체제 수립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것은 그러한 대처가 다문화 사회의 성패를 가름할 가장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이다.

1960년대 미국에서의 공민권운동을 계기로 생겨난 다문화 교육은 이민을 비롯한 소수자들이 가져 왔던 개별 문화의 독자성을 버리고 주류문화에 용해되는 것을 강요하는 동화주의에 대항, 다양한 문화를 용인하고 존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다양성의 공존'을 추구하면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사회의 다문화 진전에는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제기되고 있음이 현실이며, 이는 이제 막 그러한 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우리 사회의 건전한 다문화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문화 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에서의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잘못된 오해를 바로 잡는 것으로부터 그 작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먼저, 다문화 교육은 단순한 외국인 교육이어서는 안 된다. 흔히들 다문화 교육이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 새롭게 편입되어 오는 사람들에 대한 현지 적응 교육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사회로 편입되는 인구에 대한 우리의 언어, 문화, 습관 등을 그들에게 습득시켜 그들을 온전한 우리 사회의 한 성원으로 만들려는 노력으로만 다문화 교육을 생각한다면 이는 아주 잘못된 것일 뿐 아니라, 처음 의도와는 정반대로 다문화 사회를 파괴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낼 개연성이 크다. 그러한 교육은 다양한 문화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반대로 우리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단일문화의 지배성만을 강화하고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는 다문화 사회의 건설에 역행하는 결과를 자초할 것이다.

기존의 사회를 다문화 사회로 만들어 내는 과정에는 다양한 수단들이 동원될 수 있을 것이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니 뭐니 해도 그 사회의 각 분야에서의 다양성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 절실하다.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것이 주류적인 문화가 지배하던 곳에서 분위기를 일신시켜 다양한 색깔을 공존시키는 사회를 만들어 내는 일 이상이 아니기에, 이에는 자연스럽게 기존의 단일성에 대한 파괴를 참아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을 공존하게 해야 한다. 단일성과 유일성이 제거된 상황에서 다양성이 투입할 수 있으며, 다양성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라야 다문화가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은 두 말이 필요 없다.

또 하나, 다문화 교육은 공존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다문화 교육은 우리나라에 편입되고 있는 다양한 문화나 지역 출신자들을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원으로 키워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러한 성원으로의 성장을 위한 교육이 이미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단일 문화로의 동화로 이를 귀착 시키는데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문화 교육은 이 땅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양한 새롭게 편입된 다문화 인구들을 낙오시키지 않으면서 다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인재들로 키워내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단일의 목표문화를 위해 이들 다문화 인구들을 낙오시키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공존시켜 나가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공존 사회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유입인구에 대한 동화정책을 버려야 한다. 유입되는 새로운 인구를 기존의 사회로 동화시키는 것은 그들 유입 인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과거의 거주국 내지는 모국에서 습득하여 몸에 익혀왔던 모든 가치관, 관습 등을 비롯한 전래적인 자기 정체성을 모두 버리고, 새롭게 정착한 사회의 그것으로 흡수해 버리게 된다.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당사자들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에 빠지게 되고, 결국 현재의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를 키워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결국 이민 수입국의 입장에서도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도, 유익할 수도 없는 상태를 만들어 내고 만다. 때문에 다문화 교육은 기존 사회에서 새롭게 유입되어 들어온 인구들과의 조화로운 공존 질서를 만들어 내기 위해 무엇보다 동일성의 강화보다는 그것과는 반대의 '동일하지 않음'의 인정이 선행되는 즉 求同存異의 원칙이 지켜지는, 즉 '서로의 다름'과 '다름의 존재'가 인정되는 공존 질서를 만들어 내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결국 다문화 교육은 다양성의 공존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다시 말해 다문화 교육이 동화정책을 멀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동화정책이란 말 그대로 하나의 문화에로의 동화를 의미하며, 이에 대해 통합정책은 다양한 문화가 서로 양보하는 것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그러한 문화로 통합해 가는 정책이다. 다문화 교육은 그런 의미에서 다양성의 배제를 통한 동화가 아닌 다양성을 견지하는 공생이 대전제여야 한다. 다른 모든 인간관계도 그러하듯 다문화 사회에서의 사회적 결속력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의 색깔이나 하나의 사상으로 통일시키려 해서는 안 되며, 그것과는 다른 방향 즉 서로 간의 차이나 이견이 널리 인정되고 장려될 때가 오히려 그 사회가 원하는 사회적 결속력을 한층 더 공고화할 수 있다고 하는 역설을 가능케 해야 한다.

셋째, 다문화 교육은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흔히들 다문화 교육은 새롭게 그 사회로 편입되어 들어오는 인구들만을 그 대상으로 하면 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 또한 커다란 오해다. 다문화 교육은 신참자 일부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그 사회의 모든 인적 구성원들을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다문화 교육이란 다양한 민족 혹은 문화집단의 공존, 공생을 겨냥한 교육이다. 그렇기에 다문화 교육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에게 누구에게나 다문화적인 인식을 공유케 함으로써만 그 효과를 제대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고 어느 특정 계층, 특정 부류에 국한하여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친다면 결국 이는 그 사회 전반에는 그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마는 반신불수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다문화 교육은 그 교육의 대상이 신참 인구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진다. 즉 이 교육이 제대로의 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신참자들 못지않게 이미 그 사회의 주류집단으로 자리 잡은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도 전제될 수 있을 때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사회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주류

사회가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냉담하게 되면, 제아무리 신참자들에 대한 다문화 교육이 철저하게 이뤄진다 해도 이는 부분적인 효과에 국한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들 사회의 메조리티에게도 다문화 교육의 공유가 전제될 수 있어야만 그러한 상황에서 비로써 소수자들에게 대한 교육 또한 그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우리 사회에는 우리와는 다른 문화, 의식, 종교 등 다양한 이질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있음을 이해할 뿐 아니라, 이들 이질적인 요소에 대한 주류 사회의 제대로의 이해가 다문화 교육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은 그것 없이는 다문화 사회의 유지나 발전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신참자들을 위한 주류 사회의 협조가 아니라, 주류 사회의 생존 그 자체를 위해서도 그들 사회에 새롭게 유입되고 있는 신참자들에 대한 다문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마치 소수자를 위한 다수자의 의무가 아니라, 다수자 스스로를 위해 새롭게 요청되는 생존 방식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참 묘한 일이다. 과거 단일 사회의 신화가 지배하던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힘들었던 ‘소수를 위한 다수의 배려’가 아니라, ‘다수를 위한 생존 원칙’으로 다문화 교육이 현실적인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다문화 사회의 현장이다.

결국 우리 사회의 더욱 절박한 과제로 떠오른 다문화 교육은 한마디로 단일성을 극복하는데 그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다문화 교육은 사회적 통합과 성숙한 다문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자 변화된 다문화 환경에서 그들 사회 구성원들의 새로운 삶의 양식을 위한 시급한 현재적 과제다. 미래사회는 이주 배경을 가진 다문화 인구가 소외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언어 문화적 고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불가결의 필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다문화적 능력이 보장되지 못하면 기존의 주류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권장하는 가장 선제적 과제는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단일성의 문화를 극복하는 데 있다. 전통적으로 지키고 가꾸어온 단일문화적 전통, 그러한 기반 위에 엄존해온 ‘단일민족’, ‘한 핏줄’ 의식을 비롯한 뿌리 깊은 단일적 인식을 극복하는 지난한 작업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어렵고도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어야만 다문화 사회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 국제결혼 문제 등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에서 더 나아가 외국인들에 대한 이민의 문호도 대폭적으로 완화시켜 나갈 수 있다. 이민 수입 확대와 더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귀화제도의 획기적인 개선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다. 우리의 귀화제도는 여전히 다른 이민 선진국들에 비하면 대단히

엄격하고 제한적이다. 어지간한 한국에 대한 지식 없이는 그 관문을 통과하기는 대단히 어렵게 설계돼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다양한 귀화제도의 신설과 더불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귀화를 위한 심사도 대폭적으로 완화시켜야 한다. 결국 우리 사회도 새롭게 들어온 이주민들이 과거의 모국에 대한 정체성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확립할 수 있는, 즉 건강한 '이중 정체성(dual identity)'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인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